

근로빈곤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姜 允 求
보건복지부 차관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했던 절대빈곤층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1998년 이후 악화되었던 소득분배 상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서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근로활동에 참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계층(working poor)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닌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통합'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과 최근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는 EITC는 향후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참여를 통한 탈빈곤 정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ITC와 관련된 주요내용 및 이슈를 기획주제로 선정하여 다루고

있는 것은 EITC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프로그램과 조세체계의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EITC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근로빈곤 계층을 위한 소득보장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준비없이 단기간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많은 혼란과 문제점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EITC의 도입을 위해서는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 제도의 기본원리와 운영체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 제도 자체의 내용 및

EITC의 도입을 위해서는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 제도의 기본원리와 운영체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 제도 자체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EITC의 도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여건, 조세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등 기존의 공공부조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저소득층의 근로행태와 근로의욕, 예산제약 및 재원조달 방안 등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저

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초보장의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균형적인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 시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근로빈곤계층의 탈빈곤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차상위계층 보호 확대와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탈빈곤 정책은 참여복지

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정책현실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된 EITC 제도의 도입은 근로빈곤계층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빈곤 및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근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